

2026년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회복과 도약, 모두의 1년



대한민국정부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개정(2025년 12월)으로 혁신기업들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췄고, AI팩토리를 100개소 이상 보급하여 제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산업기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였으며,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후배터리법」제정으로 신산업 육성과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AI, 로봇,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국가핵심산업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중동 내 이스라엘-이란 분쟁, 미국·이란 갈등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지정학적 변동성으로 인해 우리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등 첨단 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육성 여건 조성 및 전략 수립

신기술 기반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2025년 12월)하여,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기업 부담이 경감되었고 또한,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년 확대되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법은 20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산업 R&D 혁신방안(2026년 1월)’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①지역을 위한 R&D, ②제조 AI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③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M.AX 얼라이언스 출범식
(2025년 9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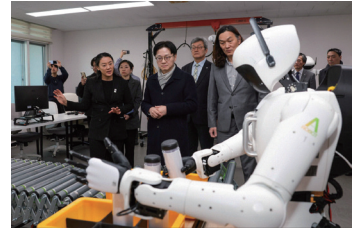
산업 AI 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활용 확산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인 제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조 AI 대전환을 지원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2025년 9월 출범하였습니다. M.AX 얼라이언스는 AI팩토리,

AI미래차(자율주행차), AI로봇(휴머노이드), AI반도체, 산단AX까지 11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별로 제조기업, AI기업, 연구소, 학계 등 1,500여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M.AX 확산을 위한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내실 다지기에도 매진하였습니다. AI반도체, AI팩토리 등 분과별로 AX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얼라이언스 내 기업·기관·전문가들간 협력을 중심으로 AX를 통한 공정개선과 자율주행 등 기술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조공정에 AI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팩토리'를 2025년도에 100개 이상 보급할 수 있었고, 10개 제조현장에 국산 휴머노이드를 투입, 실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I로봇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인 CES 2026(2026년 1월)에 '한국 휴머노이드 M.AX 공동관'을 운영, 우리 로봇 기업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선보였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업 현장방문
(2026년 1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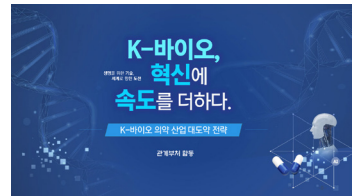


바이오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K-바이오 의약,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을 2025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발표된 전략에 따라 의약품 신속 출시를 위해 의약품 허가 심사에 AI를 활용하고, 심사 인력을 확대 추진 중입니다. 바이오 첨단기술 대전환을 위해 AI와 로봇을 활용한 신약 개발 및 자동화 실험실 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자·세포치료제 등 첨단의약품 제조 기술 개발도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확보, AI-바이오 융합 인력 양성, 자금 투자도 함께 지원 중입니다. 향후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등 제조 초격차 확보와 바이오벤처 기업의 성장(규모 확대)을 위해 인프라·금융·세계·인력 등 총력 지원하고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율도 제고하겠습니다.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전략



기후대응 에너지산업 성장동력화

탄소중립 이행이 생산공정 중심에서 제품·공급망·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의 산업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전환, 디지털전환, 녹색전환을 포괄하는 기후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기후테크 R&D'의 기획에 본격 착수하는 등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후배터리의 관리 미비 해결 및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 구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후배터리법」을 제정 중



입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자 등록제 도입, 안전검사 체계 및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및 함유율 목표 설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가, 다극화로의 패러다임 변화, 강대국의 기술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를 활용한 제조업AX, 바이오·항공우주·기후테크 등 신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 그리고 신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0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 강국 실현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팩토리 확산 등 제조업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제정(2026년 2월)하였고,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과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및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산업정책 부활로 제조 생태계 경쟁이 가열되고 있고, 국내 생산성 및 자본 기여도 하락, 인구구조의 변화 등 내재적 성장동력 저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우리제조업의 비중 : GDP 중 27.6% 차지(OECD 평균은 15.8%, 2023년기준)
- 역대 반도체 수출 순위(역률): 1위 1,734(2025년) → 2위 1,419(2024년) → 3위 1,292(2022년)
- 역대 자동차 수출 순위(역률): 1위 720(2025년) → 2위 709(2023년) → 3위 708(2024년)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주력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반도체 핵심기업 성장전략 간담회
(2026년 2월 11일)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반도체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이자 AI 시대 국가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제정된 「반도체산업 특별법」(2026년 2월)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특별위원회, 반도체특별회계 등이 신설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드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입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이차전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을 25%로 끌어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2025년 11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미래 게임체인저인 차세대 배터리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 전주기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핵심 광물 확보 및 국내 소재 생산을 지원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
(2025년 11월 13일)**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우리나라 수출 2위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대표 산업입니다. 산업부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5년 11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수립·발표하였고 미래차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

소부장 산업은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으로 정부는 소부장 산업 혁신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부장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10개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첨단전략산업 핵심 소부장 품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5년에 반도체 소재, 이차전지용 전해액 등을 생산하는 22개(비수도권 17개) 기업에 총 1,233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로봇·방산분야에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산업 R&D 혁신방안 설명자료

1 지역 특화산업 육성 R&D 확대
R&D 혁신,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위합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 R&D 확대

- 01 지역 특화산업 육성 R&D 확대
 - 지역 특화산업 육성 R&D 확대
 - 지역 특화산업 육성 R&D 확대
- 02 평가 공여제 확대 도입
 - 평가 공여제 확대 도입
- 03 지역 특화산업 육성 R&D 확대
 - 지역 특화산업 육성 R&D 확대

2 제조공정 AI 접목으로 생산성 제고
R&D 혁신으로 제조 공정지능 대전환을 달성하겠습니다.
제조공정 AI 접목으로 생산성 제고

- 01 제조 데이터 활용 촉진
 - 제조 데이터 활용 촉진
- 02 AI 접목된 혁신
 - AI 접목된 혁신

3 5G/6G를 활용한 R&D
R&D 혁신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생태계 기술역량 강화

- 수요앵커기업+협력사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기획
- 강화는 R&D * 집중 * 혁신 * 혁신 지원
- 산업의 파급효과 극대화

미래형 혁신기술 개발 및 첨단 생산기반 강화

산업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 기업,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R&D 혁신방안'(2026년 1월)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술혁신의 중심축을 지역으로 전환하고, R&D 과제 선정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R&D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AI기술을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팩토리를 산업전반에 확산하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AI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융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앵커기업은 종합 프로젝트를 기획·제안하고 정부는 R&D부터 실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극 3특 중심의 첨단산업 기반 마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부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으로 국가 산업정책과 지역 여건 등을 두루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된 권역별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등이 포함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여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재편 촉진 및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적용

2025년 8월 20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하여 구조개편의 방향, 정부 지원원칙을 포함한 구조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부터 정부와 기업은 긴밀히 논의하였고, 2025년 12월 19일 모든 사업재편 프로젝트가 사업재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2025년 12월 3일 제정되어, 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5일,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첫 사업재편으로 승인하여 금융과 세제 등 2조원 이상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석유화학·철강기업 등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2026년 3월 31일 개정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기술나눔'을 통해 대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총 236개 수혜기업에게 314건의 우수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견·중소기업 간 공동 R&D를 통해 2025년 총 12건의 성과 공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납품물량 보장, 매출확대에 따른 이익 배분 등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이루었습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별 협력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대·중·소 협력을 통해 공용 사용이 가능한 제조 AI를 개발하는 'AI 팩토리 선도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11월 17일에는 반도체 소부장 협력 테스트베드인 '반도체 트리니티* 팹'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중소·중견·대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소부장 협력모델도 3건을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 트리니티 : 정부, 대기업(칩 소자기업), 소부장 기업이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로 명명됨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혁신기술 개발 및 첨단 생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 성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37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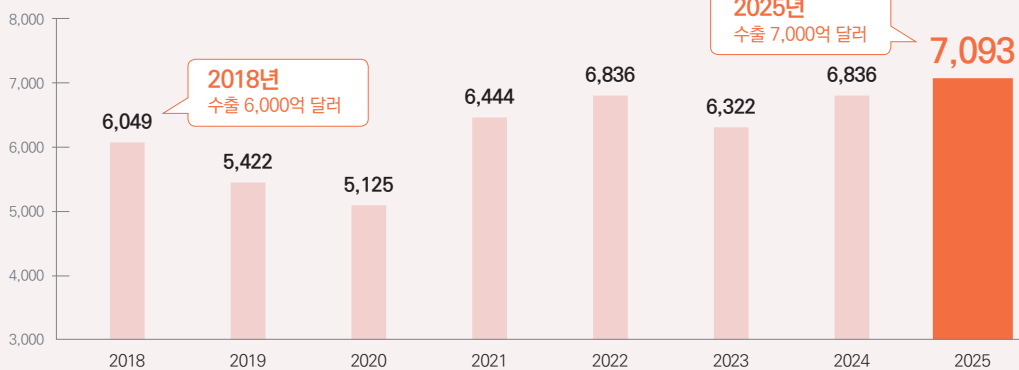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고, 2025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93억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유럽, 동북아,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안보 단속체계 고도화를 통해 불법수출·원산지표시 위반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적발을 대폭 확대하며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중 2강(G2) 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기업 및 국익을 수호하는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 준비를 위한 무역구조 혁신

이재명정부는 무역구조 혁신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 등 수출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월별 수출실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2025년 역대 최대 수출실적(7,093억달러)을 달성하여 수출 우상향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연도별 수출 현황 (단위: 억 달러)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일부 품목·시장·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여 수출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재·전력기기·바이오헬스 등 신산업과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무역보험(2026년 275조원)과 수출 위기대응 프로그램 등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 상담창구인 '무역장벽 11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100개씩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1천만달러 이상의 중추 기업으로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개편하여 관세 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해외인증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기업 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목·시장·주체 다변화를 통해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고, '모두의 수출'을 기반으로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선도하는 무역 강국으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교역국과 통상·산업 협력 강화

한미 무역협상
(2025년 7월 30일)



미국 현지시간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대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것을 발표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25%의 상호관세가 예고되었습니다. 미국은 2004년 이래 우리나라의 2위 수출 대상국인 만큼, 예고된 대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시 우리 수출기업들의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미 상품 수출액(수출비중, 순위) : 2024년 1,278억불(18.7%, 2위) → 2025년 1,229억불(17.3% 2위)

한미 관세협상 타결
(2025년 10월 29일)



이재명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6월 16일 '대미 협상 TF'를 발족하여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본격 진행하였고, 치열한 협상 끝에 2025년 10월 29일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고, 향후 의약품의 경우 최대 15% 관세, 반도체의 경우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부여, 특정 항공기·부품의 경우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대미 수출여건을 확보하게 되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대미 투자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국내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미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양국간 안정적인 통상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2026년 1월 5일)



이재명정부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바탕으로, 중국과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한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국무원 허리핑 부총리와 경제부총리간 면담과 세 차례 한중 상무장관회의

(중국 상무부) 및 4년 만의 한중 산업장관회의(중국 산업정보화부)를 개최하여 산업·통상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4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실시로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2025년 7월 3일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 및 2025년 9월 11일 ‘한중 수출통제 대화’ 등 협력 채널을 가동하였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 간 셔틀 외교를 기반으로 실용적 관점에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두 차례 한일 산업·통상 장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2026년 3월 14일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하여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및 핵심광물·자원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와는 2026년 1월 19일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 계기 유럽연합산(EU산)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된 초감가상각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이탈리아에 한국 제품이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폐지를 추진하게 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네덜란드와는 2026년 2월 11일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를 개최하였으며, 반도체,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유럽연합과도 2026년 4월 17일 차세대전략대화를 통해 신통상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중동 전쟁 발발 후 사우디·UAE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에 대한 특사 파견, 경제부총리-주한대사 면담 등을 통해 원유·나프타 등의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였습니다. 원유의 경우 작년 월평균의 89.6%(7,679만배럴, 2026년 5월 17일 기준)를 확보했고, 전략경제협력특사단 등의 활동으로 연말까지 원유 대체물량 약 3억배럴을 확보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2026년 1월 13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2026년 1월 19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우리 기업들이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25년 이후 총 9.4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습니다.(2026년 4월 기준)

특히, 중동 상황(2026년 2월) 발생에 따른 국내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5조원의 피해기업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정립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국익 침해 무역안보 교란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2025년 2월)하여 불법 무역행위를 차단하였습니다.

무역안보 전담조직 중심 집중 단속 결과, 무역안보 침해행위 적발 실적을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29배 수준(2,262억원 → 6,556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전략물자 불법수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주요 위반행위를 집중 적발하였습니다.

핵심광물 등 공공비축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우리 첨단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광물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조건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산업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해 38종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등으로 높아진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여 공공비축 물량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비축 예산을 본예산 2,007억원에서 4,15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핵심광물 비축물량은 2024년 말 국내 수요 60일분에서 2025년 말 85일분으로 확대·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비축 물량에 맞춰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하고 최근 공급망 불안 우려가 높아진 희토류에 대해서는 2026년 2월 국무회의에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상정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투자·용자 확대 등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대내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통상·산업 영역 확대와 다변화를 통해 ‘국익 중심의 통상정책’과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저탄소화와 신산업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전환(GX)'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그린전환촉진법」 제정 추진과 대규모 R&D 기획으로 탄소감축 기술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경매·용자·파트너십 등 혁신적 지원사업으로 기업의 자발적 감축과 설비투자를 촉진하였습니다. 건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대와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생활공간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탄소 다배출 중심 현재 산업구조로는 목표 달성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와 공급망 중심 경쟁 심화로 인해 탄소감축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이중과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의 체질을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는 경제구조 개혁과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력 산업의 성장지향형 그린 전환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자, 기존 정부 역할 중심의 「친환경산업법」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산업그린전환촉진법」으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안에는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업종별 그린전환 로드맵 수립, 경매·협약 등 민관협력형 이행수단, 정의로운 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고 현재 입법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탄소감축 핵심기술의 개발·실증·상용화를 아우르는 대규모 전주기 R&D 사업인 '산업GX플러스 R&D'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총 9년(2027~2035년)간 추진되는 본 사업은 현재 관련 심의를 진행 중이며, 2027년부터 본격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계의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형 지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을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감축 경매사업'(2026년 250억원), 대규모 감축설비 및 R&D 투자기업에 대해 1.3% 수준의 저리 용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용자사업'(2026년 1,720억원), 개별 기업이 아닌 공급망 단위의 감축을 지원하는 '탄소감축 파트너십'(2026년 105억원) 등을 2026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 감축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분야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 및 강화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그린전환의 핵심 수단으로서 '산업부문 순환경제 3x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2025년 12월 발표하였습니다. 동 전략은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생산·소비·회수 등 3대 기능별 활성화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동 전략의 세부과제를 구체화하여 '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고, 순환경제 기반의 신시장 창출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순환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경제 페스티벌'(2025년 7월) 및 '순환경제 상생라운지'(2025년 7월)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환경제 관련 수요·공급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 확산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탄소중립산업 육성과, 多배출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제도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배출권 가격을 보장하여 기업의 감축설비·기술 도입·투자 유도, 생산세액공제 등의 지속적 지원을 담보하는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하였으며 2026년 12월까지 제정 할 계획입니다.

선형경제 대비 순환경제의 공급망 체계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 및 역량 강화로 수출 경쟁력 제고

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등 글로벌 탄소무역규제가 사업장 단 위에서 제품 단위로 고도화·정교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주

권을 보호하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플랫폼은 기업들이 정해진 표준과 규칙에 따라 탄소배출량, 원료 정보 등 글로벌 규제 대응에 필요한 산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등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이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규제 설명회를 개최(2025년 11월)하고, 대응 가이드라인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배포(2025년 12월)함으로써,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및 전생애주기 저탄소화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축·기축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확산으로 신축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ZEB 인증 의무화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ZEB 3등급 의무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2025년 12월)하여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기축 부문에서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GR, Green Remodel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는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총 268동에 대해 국비 약 1,145억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에는 사업의 지원규모 및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재명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혁신, 제도개선,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2026년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신속히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100%(RE100, Renewable Energy 100) 산단 조성 전담조직(TF, Task Force) 신설, '3대 위기업종 경쟁력 강화 계획' 발표 등 국토 각 지역의 거점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투자와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나, 지역의 일자리와 교통 인프라 등 정주여건이 질적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정부는 혁신도시·새만금·남부산업벨트 등을 정주여건을 갖춘 국가 균형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정주여건 개선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20여 년 만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연내 2차 이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기관과 지역산업과의 연계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각 소관부처, 지방정부, 이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올해(2026년) 내 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주차시설 확충, 대중교통 운행 증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가 내실 있는 거점 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인프라 확충 및 재생에너지 거점 조성

새만금은 '자산지소(지역 생산·소비형) 혁신성장 거점'을 목표로 기업의 투자 및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닦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간연결도로는 새만금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동서2축도로와 관광용지를 연결하는 20.37km의 순환형 도로로, 2030년에 도로가 개통되면 국가산단·수변도시·관광용지 등 새만금 내 주요 거점 간 접근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RE100산단 조성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TF, Task Force)을 신설(RE100신속추진단)하였으며,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전·한수원·전북도와 전력계통연계설비 적기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2025년 12월 18일)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습니다. 나아가,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법인세 3년 면제, 2년 5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무총리 주재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약 6km²)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새만금에 동서·남북 3×3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축인 남북3축도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간선관로, RE100 시범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전력시설·스마트시설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새만금을 로봇, AI, 수소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2월 현대차 그룹과 약 9조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민간의 첫 대규모 지방투자로서 실질적인 지역 성장 효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남부산업벨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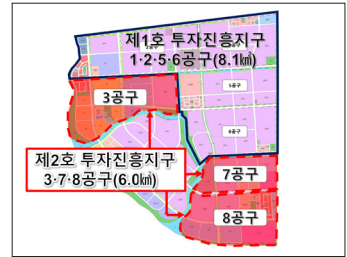
3대 위기업종인 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여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2025년 8월 20일)하여 구조개편의 방향, 정부 지원원칙을 포함한 구조개편의 로드맵을 수립하였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2025년 12월 30일)하였습니다. 2026년 2월에는 '대산 1호 프로젝트'를 첫 사업재편으로 승인하여 금융과 세제 등 2조원 이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2025년 11월 4일)하고, 2026년부터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2026년부터 4년간 총 8,146억원)을 추진하여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차전지의 경우,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2025년 11월 28일)하여 미래 핵심 기반 산업인 이차전지의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주력산업인 서산(2025년 8월)과 철강 산업의 중심지인 포항(2025년 8월), 광양(2025년 11월)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원활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의 지역 확산을 위해 "MAX 얼라이언스" 내 산업단지 AX 분과를 출범(2026년 2월 26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개별기업의 AI 도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라는 공간 안에서 AI 혁신모델을 실험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을 시작으로 전국 혁신도시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2026년 3월 25일)



석화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 승인
(2026년 2월 25일)

